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(8.28.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시작하겠습니다.

[총괄] [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]

- 8월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.5% 증가하여 12분기 연속 증가하고, 소비지출도 3.4% 증가하였습니다.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2.1 (3/4)3.5 (4/4)4.0 ('26.1/4)2.4 **(2/4)4.5**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0 (3/4)1.5 (4/4)1.6 ('26.1/4)0.4 **(2/4)1.5**
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5.2/4)0.8 (3/4)1.3 (4/4)3.6 ('26.1/4)5.3 **(2/4)3.4**

- 중동전쟁이라는 큰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.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.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+4.5 (1분위)+7.5 (2)+5.9 (3)+5.5 (4)+4.0 (5)+3.8

- “민생(民生)이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”입니다.

-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, 국민 일상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“민생안정에 총력”을 다하겠습니다.
- 청년·서민·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고,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
[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]

-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과 중·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오늘 논의하고 추진합니다.

- 우선,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,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 및 관계기관
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원을 일괄 소각하고,
상환능력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
금융공공기관의 채권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공급,
이차보전 지원규모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*하고,
* (수은·산은) 온렌딩 대출 공급 확대, (중진공) '27년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,
(소진공)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,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
-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에게는
금리·보증료 우대, 대출한도 등 인센티브*를 강화하겠습니다.
* (소진공·기은) 금리 우대 및 대출 한도 확대 (신보) 보증료를 우대 등
- 중·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.
- 내년에는 햇살론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3,000억원 확대하여
6조 2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, 창년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넓히고
대출한도 또한 1000만원으로 두배 확대*합니다.
* (대상) 기존 신용평점 하위20%↓, 기초수급자 등 → 추가 신용평점 하위50%↓ & 연소득 3,500만원↓
(한도) 500→1,000만원
-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·개인이 금리·한도를
우대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.

[추석 민생안정대책(안)]

- 아울러,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께서 다가오는 한가위를 넉넉하고
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합니다.
-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,
특히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
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- 근로·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
일상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.
- 또한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휴가비
지원·교통비 경감 등 관광·소비 활성화 과제들을 추진하고
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추석 민생안정대책」을
오늘 논의하고 다음주 중 발표하겠습니다.

[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]

- 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겠습니다.
- ☐ 재정경제부,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하여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- 특히, 9월부터는 의식주, 생필품·서비스, 교육,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.

[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]

- ☐ 연간 238조 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(First buyer)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도 개편합니다.
- ☐ 국가계약의 유연성을 높인 ‘3대 혁신 계약트랙’을 신설하여 “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”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.
- ① 첫번째,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계약시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‘개발·구매 연계 계약’을 신설합니다.
- ② 두번째, 첨단분야 등 사전에 규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규격 대신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유연한 계약이 가능한 ‘성과목표형 계약’ 제도도 도입합니다.
* (예시) 우주항공청이 성과 목표(예 : 발사단가 000억원 이하저궤도 0톤 이상 수송서비스 제공) 제시 → 입찰자 간 경쟁적 대화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서(RFP) 제출자와 계약체결
- ③ 세번째, 현행 계약방식으로 진입이 어려운 미래 신기술 첨단수요를 위해 국가계약법 내 ‘조달 샌드박스’*(시범특례)도 마련하겠습니다.
* 현재 시행령상 시범특례를 ‘법상 샌드박스’로 격상 특례 대상을 낙찰자 결정에서 계약이행 전반으로 확장 등
- ☐ 마지막으로,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보완을 거쳐 준비한 「청년일자리 회복방안」도 곧 발표하겠습니다.
- 대책의 효과가 청년들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☐ 감사합니다.